

KWDI

해외통신

2019년 4월 2차 (2019.4.16~4.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스토커' 통제 및 처벌 강화한 스토킹 보호법 (Stalking Protection Act) 제정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영국에서 상대를 병적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스토커'를 통제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을 강화한 스토킹 보호법(Stalking Protection Act)이 3월 15일 제정됐다. 스토킹 보호법은 스토킹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행동을 하는 이들을 저지할 수 있도록 경찰의 권한을 강화해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 스토킹 보호법은 경찰에 스토킹 저지 권한을 부여해 범죄 피해 발생 이전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과거엔 범죄 피해가 발생해야 경찰이 개입할 수 있었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서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스토킹이 의심될 경우 스토킹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스토킹자에게 심리 상담과 범죄 예방 목적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가해자 처벌도 강화했다. 스토킹자가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최대 5년 형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영국에서는 2016년 10월,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한 20대 여성이 살해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사망 당시 26세였던 앨리스 러글스는 이별 뒤에도 집요하게 그녀를 스토킹했던 전 남자친구인 트리만 딜런에게 잔인하게 살해됐고, 가해자는 22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앨리스 살해 사건'에서 경찰이 초동 대처에 실패해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018년 9월 보도를 통해 "앨리스가 살해되기 전에 '전 남자친구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 2명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며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 영국을 대표하는 범죄 통계인 잉글랜드 웨일스 범죄 통계(Crime Survey of England and Wales)에 따르면, 16~59세 영국인 중 여성은 5명 중 1명, 남성은 10명 중 1명꼴로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2018년 사이 스토킹 범죄 건수는 1,616건으로 전체 중 73%가 가정 폭력과 관련이 있었다고, 영국 내무성(Home Office)은 분석했다.

참고자료

- GOV.UK (2019.3.15)
"Government backed Stalking Protection Bill receives Royal Assent",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backed-stalking-protection-bill-receives-royal-assent>
(검색일: 2019.3.28.)
- Parliament.uk (2019.3.15)
"Royal Assent: Stalking Protection Bill signed into law",
<https://www.parliament.uk/business/news/2019/march/royal-assent-stalking-protection-bill-signed-into-law/>
(검색일: 2019.3.28.)
- Legislation.gov.uk (2019)
"Stalking Protection Act 2019",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9/9/contents/enacted>
(검색일: 2019.3.28.)
- The Guardian (2018.9.12)
"Two police officers disciplined over Alice Ruggles murder case",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8/sep/12/two-police-officers-disciplined-alice-ruggles-murder-case>
(검색일: 2019.3.28.)

내무성은 올해 초부터 여성을 향한 폭력을 막기 위한 법안 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1월에도 신체적·정신적 폭력뿐 아니라 경제적 통제까지 가정 폭력으로 간주하는 가정 폭력법 초안(draft Domestic Abuse Bill)을 만들어 가정 폭력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내무성은 “가정 폭력법 초안은 전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 등 아는 사람에게 스토킹 등 폭력을 당한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낯선 사람에게 스토킹 피해를 보는 이들은 스토킹 보호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일랜드 IRELAND

아일랜드, 11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시행

곽 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아일랜드는 2019년 11월부터 개정된 육아휴직 및 수당에 관한 법(Parental Leave and Benefit Bill)을 시행할 예정이다. 본 법은 포괄적인 차원에서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에 이르는 일련의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를 망라하고 있다. 그 중 중요 내용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녀가 태어난 첫 해에 부모 양측 모두 현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외에 추가적으로 각 2주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94년 제정된 모성보호법(Maternity Protection Acts)에 따르면, 여성은 26주의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¹⁾, 26주 중 출산 직전 및 직후를 포함한 8주는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기간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으로 최대 16주에 이르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무급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현재는 2016년 제정된 배우자출산휴가 및 수당에 관한 법(Paternity Leave and Benefit Act)에 따라 자녀 출산 이후 6개월 안에 2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향후 3여 년간에 걸쳐 이것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21년이 되면 부모 각 7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부모 양측에 최대 18주를 무급으로 제공하던 것을 26주로 크게 확대하고, 주당 245유로의 육아휴직 수당을 받게 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새로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시행으로 연간 최대 약 6만여 명의 부모가 본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레지나 도허티(Regina Doherty) 고용사회보호정책 장관(Minister for Employment Affairs and Social Protection)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서 출산을 직접 겪은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긍정적인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도허티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녀가 태어난 후 첫 12개월은 향후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이때 부모 모두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이번 정책의 근본’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책 취지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부모 한명이 나머지 한명에게 휴가기간을 몰아주거나 양도할 수 없게 했다.

참고자료

- RTE (2019.4.23.), "New paid parental leave and benefit from November", <https://www.rte.ie/news/ireland/2019/0423/1045049-parental-leave/> (검색일: 2019.4.26.)
- The Irish Times (2019.4.23.), "Ibec says extra paid parental leave will be 'extremely costly' for small businesses", <https://www.irishtimes.com/news/ireland/irish-news/ibec-says-extra-paid-parental-leave-will-be-extremely-costly-for-small-businesses-1.3869668> (검색일: 2019.4.26.)
- The Irish Times (2019.4.24.), "More parental leave means little at just €245 per week", <https://www.irishtimes.com/business/personal-finance/more-parental-leave-means-little-at-just-245-per-week-1.3869590> (검색일: 2019.4.26.)
- TheJournal.ie (2019.4.23.), "FactFind: Maternity, paternity and parental leave - how much time do new parents get?", <https://www.thejournal.ie/new-parental-leave-factfind-4603186-Apr2019/> (검색일: 2019.4.26.)

재계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아일랜드 중소기업 연합(Irish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ssociation, ISME)의 한 CEO는 이번 제도 발표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피고용주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부담으로 안게 될 수 있으며,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하는 사람을 채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아일랜드 경제인연합회(Irish Business and Employers Confederation)의 한 디렉터는 이번 제도 실행은 경제적으로도, 또한 인적자원 관리 면에서도 기업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하기도 했다. 공백이 생기면 그를 메우기 위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생산성 손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11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법안이 이행되는 만큼, 앞으로 출산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나아가 아일랜드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 여기서 유급이란 급여가 아닌 정부로부터 받는 수당을 의미함. 본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피고용주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금전적 지불을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고용계약 형태 및 일정 수급자격 유무에 따라 고용사회보호부(Department of Employment Affairs and Social Protection)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체계임. 이는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도 동일함.

독일 GERMANY



독일, '좋은 보육시설법(Gute-Kita-Gesetz)' 시행으로 보육 지원 강화

채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팀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좋은 보육시설법(Gute-Kita-Gesetz)'에 따라 독일 연방 정부는 2022년까지 총 55억 유로(한화 약 7조 2300억)를 주(州) 정부에 지원한다. 육아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연방 정부는 16개 주정부와 개별 계약을 맺고 재정을 지원한다. 이후 각 주 정부는 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주정부는 보육 시설의 언어/다양성 교육 및 운영시간 확대, '자격 높은 돌봄 전문인력 고용과 지원', '좋은 영양 섭취와 운동 등을 통한 건강장 성장 지원', '재교육 등으로 기관 운영자 능력 강화', '돌봄 시간 확대' 등을 위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좋은 보육시설법'은 독일 전역의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모든 아동 및 어린이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자신의 재능을 개발할 동일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어린 나이부터 이뤄지는 아동 돌봄 지원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촌과 도시 지역, 빈곤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등을 포함해 독일 전역에 동등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법 시행 취지를 밝혔다.

동법 시행에 따라 2019년 8월 1일부터는 약 120만 명의 어린이들이 비용 없이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 보조금 등 사회 복지 보조금을 받는 가족뿐만 아니라 수입이 낮은 가족도 보육 시설 이용비를 면제해주는 조항에 의해서다. 이와 함께 주 정부는 '좋은 보육시설법'에 따른 예산으로 보육 시설 이용비를 추가로 면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자료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9.4.17.), "Das Gute-KiTa-Gesetz: Für gute Kitas bundesweit",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kinderbetreuung/mehr-qualitaet-in-der-fruehen-bildung/das-gute-kita-gesetz> (검색일: 2019.4.29.)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9.4.12.), "Umsetzung des Gute-Kita-Gesetzes: Vertragsunterzeichnung mit den ersten Ländern startet",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umsetzung-des-gute-kita-gesetzes-vertragsunterzeichnung-mit-den-ersten-laendern-startet/135504> (검색일: 2019.4.29.)

- 연방 정부와 첫 번째 계약을 맺는 주(州) 정부는 ‘브레멘(Bremen)’이다. 브레멘은 이번 체결을 통해 2022년까지 연방정부로부터 약 4천 5백만 유로(한화 약 580억 원)를 받게 된다. 브레멘과의 체결 이후에는 자를란트(Saarland),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와의 계약이 이어진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각 주 정부와의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유아 교육 분야에서 모범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차례대로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 프란치스카 기파이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 정부-주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보육 시설 품질 향상과 보육 시설 이용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좋은 보육시설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일을 앞두고 있다.”며 “더 나은 보육 품질을 위한 주정부의 여러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었으며 이 방법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주정부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독일 연방 정부는 보육 시설이 아닌 가정이나 그룹 등을 통해 이뤄지는 돌봄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독일 전역에서 44,200명의 아이돌보미(육아돌보미)가 약 167,500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이들이 돌보는 3세 미만 아동 수는 2006년에서 2018년 사이에 280% 증가했다.
- 이에 가족부는 올해부터 ‘아이돌보미 강화(ProKindertagespflege)’ 프로그램을 새로 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강화’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직업교육 지원으로 아이돌보미의 능력 향상’, ‘질병이나 휴가로 인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실용적인 규정을 두어 근무조건 개선’, ‘아이돌보미의 네트워크와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별 청소년청에 대한 예산 지원’ 등 크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
- ‘아이돌보미 강화’ 프로그램에 따라 가족부는 2021년까지 독일 전역 43곳에 총 2,250만 유로(한화 약 290억 2,207만 원)를 지원한다. 연방 정부로부터 첫 번째 지원을 받은 곳은 베를린이며, 지난 2월 베를린 교육청을 통해 43만 유로(한화 약 5억 5,464만)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